

#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56호  
2016. 6. 27

## 정책동향

-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

## 시장동향

- 2016년 8개 주요 공공기관 발주 계획

## 산업정보

- 공공기관 기능 조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건설기업 사회공헌활동 현황과 시사점

## 연구원 소식

- 계간 「건설산업과 정책」 창간 외

## 건설논단

- 혁신이 필요한 대한민국 건설산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

- 지역 금융 환경과 사업 변화에 맞춘 금융 지원 프로그램 필요 -

### ■ 이란시장 진출을 계기로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수요 증가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이란과 아프리카를 방문, 실질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이란 방문 시, 경제 제재가 풀린 이란의 도로와 산업 시설 등 인프라 재건 수요와 플랜트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 30건 가계약 혹은 양해각서 체결
  - 가계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프로젝트는 30건, 약 52조원 규모에 달함.
-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들이 계약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금융 지원 방침을 천명함.
- 그러나 이란 건설시장은 물론, 다양한 지역에서 중국, 일본, 유럽 등과의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되고 있어 적기에 정부의 금융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이와 함께 최근 주춤하고 있는 해외 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존 금융 지원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경쟁 심화, 금융 환경 변화 등 해외시장 흐름에 맞춘 금융 지원 프로그램 필요

- 최근 해외 건설시장은 중국 건설기업들의 공격적인 수주 활동으로 인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경쟁이 심해지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 정책에 힘입어 투자개발형 사업 등 투자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이란, 아프리카 지역 등 해외 건설시장의 풍부한 건설 수요로 인하여 해외 건설시장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이 되고 있음. 따라서 정부와 기업, 정책 및 민간 금융의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 마련은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음.
- 특히, 정책 금융 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이란 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금융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지 못함.

- 한국수출입은행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 등 정책 금융 기관과 건설공제조합 등이 중견·중소 건설업체 『해외건설플랜트정책금융지원센터』를 2014년 초 개소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상황임.

## ■ 지역 맞춤형 금융 지원 정책 및 공공·민간의 전략적 역할 분담 필요

- 해외 건설시장과 전략적 수주를 목표로 하는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금융 지원책 필요
  -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건설 및 플랜트 사업에 대한 별도의 금융 지원책을 운영 중이고, 무역보험공사와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해외건설 보험 및 해외건설 보증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해외 건설시장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 유형과 사업 방식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 지원 시스템 정비가 필요함.
  - 특히, 공사비 현물 지급 등 대금 결제 시스템이 불안한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 금융 기관이 진출국의 금융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금융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함.
- 민간 발전 사업, BOT/BTL 등 민간 투자 방식은 투자 조건에 대한 면밀 검토가 필요함.
  - 최근 이란을 비롯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개발도상국들의 사업 추진 방식이 자국 경제 여건으로 시공자 금융 제공 등 민간 개발 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개별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BOT/BTL 등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일부 지역은 민간 투자를 위한 법률적 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음. 따라서 법 제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및 해당 국가에 제시할 수 있는 투자 모델 등 제도적 준비가 필요함.
- 해외건설 관련 펀드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 지금까지 다국적 투자 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해외건설 관련 펀드(글로벌인프라펀드(GIF),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 해외 SOC펀드 등)의 성과가 극히 미미한 상황임.
  - 이란 시장 진출에는 막대한 규모의 일시적 자금 수요가 예상되는 바, 공동 투자 방식인 펀드는 중요한 금융 지원책임. 이번에 조성되는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 성공적인 수주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전략적 역할 분담이 필요함.
  - 우리 건설기업의 파이낸싱 능력을 고려하면 정책 은행과 민간 은행의 적극적 지원이 필수적임.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적정 리스크 분담, 투자 협력 등 공동 진출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함.
  - 사업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참여한다고 해도, 건설기업이 활용 가능한 적정 규모 자금의 적기 조달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Control-tower 구성이 필요함.

김영덕(연구위원 · ydkim@cerik.re.kr)

## 2016년 주요 8개 공공기관 발주 계획

- 상반기 56%, 하반기 44% 발주 계획이나 하반기 발주는 당초 계획보다 증가 예상 -

### ■ 2016년 주요 8개 공공기관 발주 계획, 전년보다 8.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주요 8개 공공기관의 신규 공사 발주 계획을 살펴본 결과, 이들 기관의 올해 공사 발주 금액은 32.85조원으로 추정됨. 이는 지난해보다 3조원(8.2%) 정도 감소한 수치로 올해 공공 수주가 지난해에 비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 <표 1>과 같이 2015년 높은 수준을 보이던 8개 주요 공공기관의 신규 공사 발주 계획은 금년을 기점으로 하향세가 형성되고 있음.
  - 기관별로 보면, 8개의 주요 공공기관 중 절반이 넘는 5개 공공기관의 발주 계획 물량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발주 규모가 큰 LH공사, 조달청, 철도시설공단 등의 발주가 전년보다 최소 0.4조원에서 최대 2.4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한국도로공사, SH공사 등 일부 기관의 발주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주요 공공기관 최근 3년간 발주 계획

(단위 : 조원)

구분	2014년 계획	2015년 계획	2016년 계획			전년 계획 대비
			상반기	하반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	9.7	11.8	4.6	6.1	10.7	↓
조달청	8.4	9.5	6.1	2.0	8.1	↓
한국도로공사	1.4	3.8	4.3	2.5	6.8	↑
한국철도시설공단	5.6	6.0	0.8	1.5	2.3	↓
SH공사	2.2	1.1	0.8	1.0	1.8	↑
한국수자원공사	1.3	1.5	0.7	0.5	1.2	↓
한국전력공사	1.3	1.3	0.76	0.34	1.1	↓
한국농어촌공사	1.4	0.8	0.35	0.5	0.85	↑
합계	31.3	35.8	18.41	14.44	32.85	↓

주 : 각 연도별로 1~3월에 발표 및 보도된 자료를 위주로 취합된 자료이며, 정책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공종별로 보면 도로와 주택은 크게 증가, 철도는 크게 감소**

- 공공기관 중 한국도로공사와 LH공사의 발주 규모가 전년 대비 2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계획되어, 도로와 주택 발주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올해 주요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발주 규모를 차지하는 기관은 LH공사임. 상반기(4.6조원)에 비해 하반기(6.1조원) 발주 예정 물량이 1.5조원 정도 많은 편임.
  - 따라서 하반기에 공공 주택 분야 체감 경기는 양호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도로공사는 전년보다 3.0조원 증가한 6.8조원을 계획함. 상반기에 4.3조원, 하반기에 2.5조원을 계획함. 연간 발주 물량이 전년대비 80%가까지 증가한 탓에 도로 분야 하반기 체감 경기는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됨.
  - 지난해 6.0조원으로 발주가 양호했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2.3조원으로 기관 중에서는 가장 감소 폭이 클 전망이다.
  - 다음은 조달청으로, 중앙 조달 신규 공사 물량은 전년보다 1.4조원 감소한 8.1조원임. 상반기에 6.1조원 하반기에 2.0조원이 발주될 계획임.

■ ■ **종합심사낙찰제와 종합평가낙찰제 대상 공사의 발주가 지연되어, 하반기 실제 발주 규모는 계획보다 증가 예상**

- 전체 발주 계획 물량의 56%인 18.4조원이 상반기에 배정되어 상반기 공사 발주가 하반기보다 활발할 전망
  - 나머지 44%인 14.4조원의 발주 물량이 하반기에 배정됨. 다만, 발주 규모가 큰 LH공사는 하반기에 계획된 물량이 더 많은 상황으로 하반기 공공 주택 발주가 활발할 전망이다.
  - 한편, 종합심사낙찰제와 종합평가낙찰제 세부 기준 마련이 늦어짐에 따라 일부 공사 발주가 지연됨. 결국, 공사 발주와 계약 시점 간의 시차를 감안할 경우 공공 수주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 공공기관 기능 조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sup>1)</sup>

- 지속 추진 통해 민간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하는 단초 역할 기대 -

### ■ 정부, 지난 6월 14일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안 발표

- 정부는 지난 6월 1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의결함. 이에 따르면 5개 기관이 통폐합되고, 2개 기관은 구조조정을, 그리고 29개 기관은 효율화를 목표로 관련 기능을 조정하도록 함.
  - 공공기관 기능 조정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개혁 과제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 기능 조정의 기본 방향은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비 핵심 업무의 축소, 민간 개방 확대, 민간 경합 분야의 축소, 그리고 경영 효율화임.

### ■ 에너지 분야 : 해외 발전 진출 분야 특화, 전력 판매, 원전 상설설계 민간 개방 확대 등

- 에너지 관련 기관 간 해외 중복 진출 및 우리 기관간의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해 진출 분야를 특화하고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력을 강화함. 나아가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기능 효율화를 통해 공기업 해외 진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해외 진출 분야 특화 방안으로 한국전력은 대형 사업과 에너지 신산업을, 그리고 나머지 발전 5개사는 화력 및 신재생 에너지, O&M(Operation and Maintenance) 부분을 담당하도록 함.
- 에너지 분야 중 민간 개방이 확대되고 민간 경합이 축소되는 주요 분야로는 전력 소매 판매, 가스 도입 및 도매, 그리고 원전 상설 설계 등임.
  - 전력 소매 판매의 경우 규제 완화 및 단계적 민간 개방을 통해 현재 한국전력의 독점 체계를 경쟁 체계로 전환하여 다양한 사업 모델을 창출하고자 함. 또한, 가스 도입 및 도매의 경우 민간 직수입<sup>2)</sup>을 활성화해 시장 경쟁 구도를 조성한 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함.

1) 본고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14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중 건설업 관련 내용을 선별, 정리한 것임.  
 2) 현재 발전산업용 수요자는 자가 소비에 한해 직수입 가능하며, 포스코, GS에너지, SK E&S, 중부발전 4개사가 직수입중임 (2015년 총 LNG 수입량의 5.7% 수준).

- 현재 한국전력기술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원도급 수주를 받은 후 상세설계의 약 50%를 민간에게 하도급 주는 구도인 원전 상세설계의 경우 2017년 민간 개방 비율을 60%로 상향 조정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개방 비율을 확대함.
- 나아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공공기관의 순차적인 상장을 추진하는 한편, 원전 수출 사업과 에너지 신사업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함.
  -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발전 5사, 한수원, 한전KDN, 한국가스기술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분의 20~30%를 상장, 혼합소유제를 추진함.
  - 미래 대비 기능 강화를 위해 원전 사업 주체인 한수원의 원전 수출 기능을 강화하며, 관련 공공기관에 에너지 신산업 투자 및 기술 개발 확대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

### ■ 환경 분야 : 관련 시설의 민간 위탁 확대 및 재활용 시설 설치 등 민간 경합 분야 축소

- 환경 분야의 경우 공공기관이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위탁 업무를 축소하는 한편, 재활용 시설 설치, 슬레이트 처리, 소규모 하수도 등 기존에 민간과 경합하던 업무에서 철수함.
  - 환경공단은 지자체에서 위탁 받아 운영하던 하남시 펌프장·복합 환경 기초시설(2016년 11월 만료), 비점오염 저감 시설 35개소(2016년 12월 만료),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 시스템 관리 9개소(2021년 6월 만료) 등의 위탁 기간 만료 시 위탁 업무에서 철수하기로 함.
  - 또한, 2018년 이후에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및 생태하천 복원시설 설치 사업 등에 환경공단의 참여를 중단하고,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소규모 하수도(3,000m<sup>3</sup>/일 미만) 기술 진단 분야에서도 2017년부터 철수하여 민간 기업이 전담하도록 함.

### ■ 공공기관 개혁 로드맵, 차질 없는 지속 추진 담보되어야 실효성 확보

- 2015~16년 두 해에 걸쳐 발표된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은 경쟁 체계의 접목을 통해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와 민간 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그간 독점적인 체계를 고수했던 에너지 분야의 경우 단계적 개방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전기세 등 부작용 예방을 위해 선진국의 민영화 사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요망됨.
  - 현 로드맵이 중장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추진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할 것임.

김민형(연구위원 · mhkim@cerik.re.kr)

## 건설기업 사회공헌활동 현황과 시사점

- 건설업,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사회적 책임에 많은 관심 기울여야 -

###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증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층 간 소득 양극화와 실업난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sup>3)</sup>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일반적으로 4단계(Carroll, 1979)<sup>4)</sup>로 분류됨. 먼저, 1단계 경제적 책임은 기업이 이윤 창출을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임. 다음으로 2단계 법적 책임은 기업이 사회적 규제인 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3단계 윤리적 책임은 기업이 사회의 일원으로 윤리적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마지막으로 4단계 자선적 책임은 기업이 사회에 자발적으로 기부를 해야 하는 행위를 의미함.
  - 종합해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자신들의 존재 근거인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책임 수행의 한 형태가 바로 ‘사회공헌활동’임.

### ■ 건설업도 사회적 책임에 많은 관심 기울여

- 건설업은 투자 측면에서 GDP(국내총생산)의 14.6%(2015년 기준)를 차지하는 산업인 만큼 국민들이 기대하는 요구 수준이 높고 관심도 높은 산업임. CSR이 존경받는 기업의 선정 기준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현재 국내 건설업체들도 CSR의 한 형태인 사회공헌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한 건설업계 사회공헌활동 지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페이지 <그림 1>과 같이 2011년 623억원에서 2014년 1,022억원으로 64.0%가 증가하였음.
  - 건설업체의 매출액 및 이익 대비 사회공헌활동 총지출액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페이지 <그림 2>와 같이 2011년 기준<sup>5)</sup>으로 매출액 대비 0.24%, 경상이익 대비 4.62%, 순이익 대비 7.79%를

3)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사회의 목표나 가치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을 추구하고, 이에 맞는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들을 따라야 하는 기업의 의무’라고 정의됨(Bowen, H.R. (1953),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ew York: Harper & Row).

4) Carroll, A. B. (1979),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Toward the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Stakeholders”, Business Horizons.

5) 2014년도 건설업체의 매출액 및 이익 대비 사회공헌활동 총 지출액을 조사한 데이터가 없는 관계로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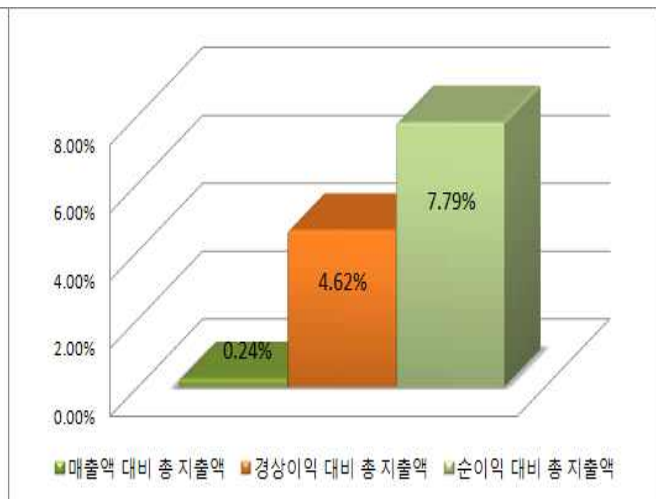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2 참조). 이는 2014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사회공헌백서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매출액 대비 0.17%, 경상이익 대비 3.5%)보다 높은 비율로, 건설업체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주로 교육·학교·학술 분야, 사회복지 분야, 국제구호·국제교류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함.

<그림1> 건설업계 사회공헌활동 지출액 추이

<그림2> 2011년 건설업체의 매출액 및 이익 대비 사회공헌활동 총 지출액 비율



주 : 1) <그림1>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대한건설협회 보도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매년 80여개 내외의 종합건설업체, 40여개 내외의 전문건설업체 및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의 회원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금액임.  
 2) <그림2>는 2012년 건설산업 사회공헌백서의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매출액 대비 총지출액 비율은 79개 응답 기업, 경상이익 대비 총지출액 비율은 58개 응답 기업, 순이익 대비 총지출액 비율은 65개 응답 기업 기준임.

##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 미쳐

● CSR 활동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 및 가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건설업체는 향후 지속적 성장을 위해 사회공헌활동과 윤리 경영 등 CSR 활동을 다각도에서 시행해야 할 것임.

-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은 내부 경영적 측면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고양하고, 애사심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임.
- 외부적으로는 지역 사회 이해관계자나 외부 협력업체들에게도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서로 간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고양시켜 매출 증대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최은정(책임연구원 · kciel21@cerik.re.kr)

건설산업 사회공헌백서」 자료를 활용함.

## 계간 「건설산업과 정책」 창간

- 연구원 발간물 질적 제고 전략의 일환, 건설산업 핵심 이슈 심층 분석에 중점 -

### ■ 6월 15일 계간 「건설산업과 정책」 첫 호 발간

- 연구원은 지난 6월 15일, 계간 「건설산업과 정책」 첫 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는 연구원이 2016년 들어 적극 추진 중인 발간물 질적 제고 전략의 일환입니다.
- 지난 4월호를 끝으로 폐간된 월간 「CERIK저널」이 단편적인 이슈나 뉴스를 전달하는 데 그친 단점을 보완하는 한편, 건설산업 핵심 이슈에 대한 심층 진단과 집중 분석을 통해 차별화를 시도하였습니다.
  - 분야별 핵심 주제에 대한 연구 성과를 집약하는 학술지의 장점과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잡지의 특성을 한데 아우르고 있습니다.
- 창간호의 주제는 「한국 건설산업 혁신」이며, 다양한 콘텐츠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 전문 기관을 통한 설문조사와 특별 좌담회, 인터뷰, 오피니언 등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을 심도 있게 분석함. 또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통해 국내 건설산업의 현주소를 조명함. 서평, 건설이야기, 통계, CERIK뉴스 등도 함께 제공함.
- 연구원은 앞으로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택하고 집중 분석을 통해 한국 건설산업의 선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나갈 계획입니다.

### ■ 「건설동향브리핑」, 이제 온라인으로 발간합니다!

연구원은 7월 4일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그동안 지면을 통해 발간하던 「건설동향브리핑」을 온라인 출판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발간을 계기로 보다 시의성 있는 주제 발굴과 신속한 정보 제공을 약속드리오며, 「건설동향브리핑」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정책 개선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6. 2	국토교통부	• 건설 안전과 주관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개선 TF(4차 회의)'에 이영한 연구본부장 참여
6. 8	동반성장위원회	•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 경영금융연구실 이홍일 실장 참여
6. 17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 '안전사회소위원회 전문위원회 회의'에 산업정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
	국토교통부	• 건설인력기재과 주관 '건설기능인력 육성 관련 건설 현장 방문 및 실태조사' 회의에 산업정책연구실 나경연 연구위원 참여
6. 21	통계청	• 산업통계과 주관 '건설업종 표준산업분류체계 개정 자문회의'에 산업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참여

■ 주요 발간물

유형	제목	주요 내용
이슈포커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정부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급 지연 등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으나, 건설업계 및 건설노조는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하도급대금 체불을 양산하고, 효율적 공사 수행을 제한한다고 주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연구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 예방하고 건설기업의 자율적 경영 활동과 효율적 공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하도급대금 지급 제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li> <li>- 이를 위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와 같은 현행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고 설문 조사를 통해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li> </ul> </li> <li>• 건설업계 설문 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에 대해 '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는 의견이 67.9%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에 따른 공사 대금 체불 개선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57.2%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고,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15.9%에 불과함.</li> <li>-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에 따른 우려 사항에 대해 '공사 대금 체불의 양산으로 원도급자의 대위변제 등 선의의 피해 확대'가 61.6%, '하수급인의 관리·감독 약화에 따른 시공 효율성 저하'에 30.5%가 응답함.</li> </ul> </li> <li>•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의 확실성', '불공정 거래 행위의 예방', '규제의 최소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 방안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와 같은 건설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운영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li> <li>- 하도급대금 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자재·장비대금 및 임금에 대한 지급 보증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하며, 이러한 체불 문제를 일으키는 부실·부적격 업체 퇴출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함.</li> <li>-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발주자와 공사 감독관의 감시 및 관리·감독 업무에 내실을 기해야 함.</li> </ul> </li> </ul>

## 기업가 정신과 혁신이 필요한 건설산업

컵 속에 담긴 물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한다. ‘아직도 반잔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벌써 반잔이나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건설산업에 대한 평가도 그렇다.

신도시 개발 사례를 보자. 최근 10여 년간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수도권 2기 신도시 등 무려 20개가 넘는 신도시 개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추진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 산다. 중동, 동남아 등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신도시 모델을 배우고, 자국에 그 모델을 이식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신도시 개발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적하느라 바쁘다. 우리 건설산업의 성과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이유다.

나아가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과제로 ‘창조적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강조하고 싶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창조적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 그런데 해외에서 우리 건설업체들을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은 우리보다 더 창조적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최대 건설업체인 완다그룹 사례를 보자. 완다그룹은 창립 26년 만인 지난 2014년에 매출 44조원을 기록했다. 창립자인 왕젠린 회장은 완다그룹의 성장 과정을 크게 4단계로 설명한다. 첫째, 다렌의 지역 건설업체에 불과했던 완다가 광저우에 진출하면서 전국

업체로 성장했다. 둘째, 주택분양 사업 중심에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 운영 사업을 하는 회사로 탈바꿈했다. 셋째, 부동산개발 사업에서 벗어나 문화·관광 사업 등 연관 산업으로 확장했다. 넷째, 다국적 발전을 위해 글로벌 인수 합병(M&A)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완다그룹의 4단계에 걸친 발전 과정 중에서 우리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두 번째 단계조차 진입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완다그룹 성장 원인의 하나가 창조적 기업가 정신이었음은 분명하다. 우리 건설업체들도 완다그룹과 마찬가지로 운영 사업이나 문화·관광 등 연관 산업으로의 진출,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新성장 동력의 발굴을 위해서는 창조적 기업가 정신의 발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조적 기업가 정신의 발휘가 건설업체의 몫이라면, 정부는 건설산업의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건설산업의 융복합, 스마트시티 건설 등 새로운 기술의 수용과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화 시대의 낡은 법·제도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건설산업의 혁신은 최대 수요자인 정부가 앞장서야 할 일이다. <건설경제, 2016. 6. 17>